



이상학

(前)고보생명노조위원장

실업자 200만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외 여러 기관과 단계에서 200만명이 넘는 고실업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업증가와 정부 기업의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실업자수가 200만명(실업률 9.3%)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연구소는 경제회생에 실패하면 2000년까지 실업자수가 250만(실업률 11.1%)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계적인 투자자문회사인 미국의 모건스탠리사도 한국의 실업자가 200만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고실업상태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고실업상태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98년 2월말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연달 전에 비해 30만명이 늘어났으며 97년 평균인 55만6천명에 비해 무려 68만명의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급증하는 실업자

작년 연말 이후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무에 10,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정리해고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봄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실업이 주로 발생하였다면 앞으로는 대기업과 사무직 부문에서 대량의 인원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분석이 일치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사무직종에서의 정리해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고 그 동안 강력한 노조의 견제로 인원정리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기업에서의 인원정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용자동차가 대우자동차로 인수합병되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개별기업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기업에서의 정리해고 돌풍은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총취업자수가 감소하였는데 실업자의 증가로 총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지점이다. 97년 10월 이후 경제활동인구가 110만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의 상당부분은 실제 실업자로 보아도 될 것이다. 취업자가 실직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거나 자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표 1〉 실업자 추이

(단위 : 천명)

연 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
1997.1	20948	20397	551
1997.2	20929	20268	662
1997.3	21457	20734	723
1997.4	21822	21219	603
1997.5	21909	21359	550
1997.6	21874	21378	496
1997.7	21865	21389	476
1997.8	21773	21308	465
1997.9	21779	21310	469
1997.10	21793	21341	452
1997.11	21761	21188	574
1997.12	21340	20682	658
1998.1	20645	19711	939
1998.2			1,235

* 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199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있던 실업자수가 1997년 11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8년 1월에는 100만 명에 육박하였으며 2월에는 120만

실업자수 계산방식과 그 불확실성

실업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라 한다.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계산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학생, 주부 등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할 의욕을 가진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일자리가 없는 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도 구직활동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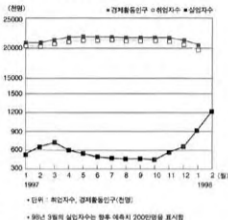
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를 제외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5세 이상의 사람이 수입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실업자에 해당한다.

1997년 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4,599만명(이하의 인구추계는 통계청 발표 연도별 추계인구에 따름)이다. 이 중에서 15세 미만

의 인구인 1,029만 명을 제외한 3,570만 명이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학생,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자발적실업자를 제외한 2,134만명이 경제활동인구이다. 1,430만 명 정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구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658만 명이 실업자에 해당한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97년 11월 이후 실업자수는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위원회에서 정리해고가 합의 된 이후 실업자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의 전망치를 고려한다면 실업률은 가히 실인적인 수준이다.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같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을 포기하

(그림 1) 실업자수 추이



는 노동자의 숫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는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구하는 일을 아예 포기한 실망실업자로 보아도 될 것 같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실업자에 대한 추이가 상대적으로 분명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직실업자의 76%(노동부 발표)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계는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실업통계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기준

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자의 숫자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공식 실업률은 아직 서구의 국가들에 비하면 높지 않은 편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은 공식통계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노동부에서도 실업률에 대한 보조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구조 대폭 개편해야

우리나라 가장 대부분은 가장의 수입에 전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 대체로 한 사람의 경제활동 수입에 2.4인 정도의 생계가 달려 있음은 위의 전체적인 인구 구성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2000만 정도의 취업자가 4500만의 생활을 책임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1995·96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나라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실업률	11.6	11.5	3.3	2.0	7.6	5.4

• 자료 : 한국은행, 각국의 주요경제지표
 • 프랑스는 95년 자료이며 나머지 나라는 96년 자료임

실업자가 200만을 넘어설 경우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게 된다. 실업자가 200만을 넘어서면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독일, 프랑스 등 서구 국가와 같이 두 자리 실업률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실업자 200만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는 실업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등 실업문제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사회보장이 잘되어있는 편이고 직업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잘 발달되어있어 재취업의 기회도 넓어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발달되어있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거의 없다. 고용보험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고 지금과 같은 고실업이 지속되면 얼마까지 않아 실업보험 재원이 바닥날 지경이다. 실업보험이외에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개별주의의 원칙이 강한 보험운영으로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정부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리로 쏟아지는 엄청난 실업자를 감당할 방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시방편적인 대응보다는 재벌해체, 경제 사회구조의 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데서 대량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